

2010년대 이후 한러관계 평가와 한국 신정부의 러시아발 리스크 대응 전략*

장세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논문요약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한러관계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현 시기 러시아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2010년대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전략적 이해와 지향의 수렴을 추구하면서 관계 발전의 동력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과 정부, 민간, 민간 차원의 정례·수시 교류, 비자면제협정의 체결 등이 양자관계의 진전을 촉진한 주요 요인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한러관계는 국제·지역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외부 요인으로 말미암아 정체·퇴행의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국제·지역 현안이 양자관계에 여러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러시아의 과도한 대북 경사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균형적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회복과 복원을 위한 계기를 창출해야 한다. 다섯째, 양국 간 공식적·비공식적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

주제어: 한러관계, 신북방정책, 신동방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 본 연구는 2022년 통일연구원 연구용역 과제(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에서 필자의 집필 부분 일부와 2022년 10월 26일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 학술회의의 “2010년대 이후 한러교류의 성과와 과제” 제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I. 문제제기

한국과 러시아가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1990년 9월 외교관계를 정상화한지 2022년 현재 32년이 되었다. 한소 국교 정상화 이후 현재까지 양국은 1994년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관계’, 2004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합의·발표하면서 양자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다만, 그동안의 양자관계는 그 성격의 측면에서 ① 기대, ② 담보 또는 소강, ③ 냉각·악화, ④ 재조정, ⑤ 진전, ⑥ 재도약 도모 ⑦ 관계 증진과 갈등 요소 혼재, ⑧ 침체·경색의 8단계의 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평가된다.¹⁾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러관계가 그동안 더디지만 꾸준히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양자관계의 발전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양국 간의 높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에 비추어 발전의 속도와 수준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는 2010년 이후에도 양자관계에서 적지 않은 굴곡의 순간들을 대면해야만 했다. 양국은 2008년 한러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격상한 후 상호 전략적 이해와 정책적 지향의 수렴, 빈번한 정상회담, 수교 20·25·30주년 기념행사, 정부·민관·민간 차원의 정례 교류, 비자면제협정 체결 등을 통해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러관계는 미러·미중 등 역내 주요국 간 대립적 관계, 한반도 안보 위기의 지속·악화, 러시아발 국제 안보위기의 발생, 코로나19의 대확산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장애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2017년부터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19의 대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등의 여러 악재로 인하여 양자관계에 심각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고, 침체·경색 국면으로의 전환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30여 년간 획득한 소중한 성과에 기초하여 양자관계의 관리와 재도약의 계

1) 서동주·장세호,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pp. 9~11.

기를 마련해야 하는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무엇보다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성된 국제·지역 정세는 양자관계에 여러 리스크를 초래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11월 우크라이나 위기 발생 이후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균형적 시각에 기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고,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고강도 대러 제재가 시작되자 이에 동참을 결정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미국/서방 간 대결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련의 ‘연쇄 반응(chain reaction) 게임’의 과정에서 점차 운신의 폭을 제한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양국 간 정치·안보 대화와 상호작용은 물론, 지난 30여 년간 형성된 경제 협력의 구조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처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큰 타격이 발생했으며 회복 방법과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10년대 이후 한러관계의 현황, 그리고 주요 성과와 한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현 시기 러시아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2010년대 이후 한러교류의 성과와 한계

1.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3년)

이명박 정부 시기는 2008년 양국 공히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8월 이명박·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한러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사실상 최고 단계로 격상시키고 이를 내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꾸준히 진행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작금의 한러관계가 과연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칭할만한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대변되

는 한러 양국 관계가 아직까지 외교적 수사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²⁾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지구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동반자로 상호 인식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³⁾

이명박-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8년 8월 정상회담을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공동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지방 등 다양한 차원의 대화 확대를 통한 실질협력 기반 확대, 러시아, 한국, 그리고 제3국을 포함하는 공동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 서감차카 해상광구 개발사업 등에 관한 긴밀한 협력,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및 TKR-TSR 연결사업 현실화 등의 남북러 3각협력 추진을 합의했다.⁴⁾ 특히, 이 시기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와 7차례, 푸틴과 1차례 총 8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친 바 있다.⁵⁾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게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1차관급 전략대회 개최를 합의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전략대회를 개최하면서 양자 간 핵심 이슈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한러수교 20주년을 맞아 두 차례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 및 교류 확대, 그리고 다채로운 정부, 민관,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진행됨으로써 한러관계 진전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됐다.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되어 2010년 양국 간 교역량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011년에는 21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200억

2) 홍완석, “[시론] 한-러 관계, 과연 전략적인가?.” 『중앙일보』 2013년 11월 15일.

3) 신범식,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1호, 2010, p. 246.

4) 고재남, “한-러 정상회담의 평가 및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8년 10월 17일; 홍완석,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의미, 평가, 과제.” 『슬라브연구』 25권 1호, 2009; 신범식,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p. 246.에서 재인용.

5) 고재남, “역대 정부의 대러 정책 성과 및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대러 정책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 봄, 2013, pp. 90~91.

달러 교역량을 달성했으며, 2012년에는 22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냈다.⁶⁾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의 해결에 있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강화를 강조했고, 그 결과 남북관계의 급속한 경색과 악화 상황이 조성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일련의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전략적 이해의 간극을 노출하기도 했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로 말미암아 일체의 남북 경제협력·교류가 전격 중단됐다. 결국, 이명박 정부 시기 악화된 남북관계는 남북러 3각협력을 통한 이명박 정부의 ‘3대 신 실크로드 구상(철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실현에 부정적으로 기능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러관계의 질적 도약을 저해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7년)

2013년 2월 공식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격동하는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권력지형 변화 속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대외정책 어젠다를 통해 국가안보의 보장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코자 했다. 특히 집권 초기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그동안 주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갖지 못했던 대러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해 기대를 모았다. 더불어, 푸틴 3기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전략을 위시한 ‘신동방정책’이 가시화·본격화됨으로써 한러관계사 측면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공고화와 내실화에 유의미한 진전을 기대케 했다.

6) 서동주, “한·러 관계 분야.” 『2010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용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1; 서동주, “한러관계 결산: 전략적 협력의 초석 다지기.” 『2011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용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2; 서동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놓기 - 2012년 한·러관계 결산.” 『2012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용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3.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비자 면제 협정과 문화원 개설 협정 등 35개항 공동성명, 2개의 협정, 6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한러 간 정치·안보대화 강화, 민간 교류 활성화, 교역·투자 확대, 지역협력 강화, 나진-하산, 수산, 교통인프라, 북극항로 개발, 우주·과학기술, 농업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으로 집약된다.⁷⁾ 특히 공동성명에 북핵 반대와 불용을 명문화하고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정책 어젠다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⁸⁾ 또한 양국 간 최고위급·고위급 정치·안보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 그리고 외교부서 간 정례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도 ‘전략적 관계’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 비자 면제 협정 체결로 제 분야에서의 획기적 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협력 사업을 조기 추진 사업과 증장기 추진 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실질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⁹⁾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 한러관계는 한반도 문제와 러-서방 관계의 악화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면, 한러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한 인식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공동선언에는 “2005년 9월 19일자 공동성명의 목표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는 원론적 문구가 명기됐다.¹⁰⁾ 이는 선 대화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 필요성을 강조해온

7) 서동주, “미래 한-러관계 내실화를 위한 여정.” 『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용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4, p. 107.

8) 홍완석, “[시론] 한-러 관계, 과연 전략적인가?.”

9)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성명 전문”, 2013년 11월 13일.

10) 위의 글.

한국의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인식차이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¹¹⁾ 더욱이 북한은 2013년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잠정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이후 개성공단은 여러 곡절 끝에 재가동됐으나, 2016년 1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 박근혜 정부의 전면 가동 중단 발표로 완전히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를 매개로 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한러관계의 진전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2014년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한러 협력에 큰 한계가 노정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대러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행을 위한 정치작업에 주력하면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비롯해 남북러 3각 경협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¹²⁾ 예컨대, 한러 양국은 나진-하산 간 철도와 나진항 3부두 개발 사업 등에서 북러 합작회사인 ‘나선코트라스’의 러시아 측 지분(70%)의 약 절반(34%)을 한국 측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5·24 조치를 우회하여 남북러 3각 경협을 추진했다. 특히 2014년 11월, 2015년 4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 운송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산 유연탄이 포항 등으로 반입됐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아 한국이 독자 해운제재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이후 러시아는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통과시키면서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예외로 관철시키며 동 사업의 지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한국의 우려로 말미암아 동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기 재개될 수 없었다.¹³⁾

11) “[한러 정상회담] 남북러 경제협력 통해 북핵도 해결.” 『한국일보』, 2013년 11월 14일.

12) 현승수, “2014 한-러 관계 회고와 전망: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 속 지속가능한 협력 모색.” 『2014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용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5, pp. 153~154.

13) 라승도 외, 『극동의 부상과 러시아의 미래』,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2019, pp. 531~536.

3.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2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 직후 북방국가들과의 협력 증대와 유라시아 지역의 연계성 증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며 신북방정책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 입안의 배경에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거대 시장이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북방지역의 가치, 역내 주요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경제 통합 움직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작용했다. 당연히 러시아는 동 정책의 3개 권역, 14개 대상 국가 중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국빈방문을 비롯해 5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정상·고위급 교류를 통해 대러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 2017년 9월 동방경제포럼, 2018년 11월 EAS 정상회의, 2019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리고 2018년 국빈 방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수행했다. 그 뿐만 아니라, 한러 양국 정상은 2017년 5월, 2017년 9월, 2018년 4월, 2020년 9월 전화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외교장관 회담 5회, 대통령 특사 방러,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한, 박병석 국회의장 방러의 사례와 같이 활발한 정상·고위급 교류를 지속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한러지방협력포럼을 신설하는 등 양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의 구축과 협력 채널의 다층화에도 성과를 거뒀다. 한러지방협력포럼은 한동해 지방 협력 시대에 발맞춰 지방 주도의 실질협력 강화와 상시 협력 채널·플랫폼 형성 필요성에 대응한 조치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대확산에 따라 한해 건너뛰기는 했지만, 2018년 포항에서 1차 회의,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차 회의, 2021년 11월 울산에서 3차 회의가 개최됐다. 또한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는 2019년부터 북방포럼, 한러협의회 등의 새로운 협력 협의·소통 채널을 가동했다.¹⁴⁾

이와 함께, 신북방정책의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 금융지원체계 형성과

혁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도 마련됐다. 2019년 9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4억불 규모의 한러투자펀드 설립에 합의했으며, 한-유라시아 협력펀드와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도 조성됐다. 한러 혁신센터, 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카자흐스탄 기술센터의 개소, 우즈베키스탄 국가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한러 혁신플랫폼공동위 개최 등도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된다.¹⁵⁾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된 신북방정책과 대러 협력 정책은 여러 면에서 오류와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신북방정책이 상위 정책인 동북아플러스책 임공동체 구상의 구현을 위한 ‘변영의 축’ 중 하나로 규정됨으로써 여러 혼란과 한계를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정부의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에 대한 협력 정책은 그 자체로 늘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포괄적 대외 전략 또는 지역 전략의 하나로 규정돼왔다. 그런데 동북아플러스책 임공동체 구상의 ‘변영의 축’에 속한 일 정책이라는 신북방정책의 자리매김은 북방국가들과의 협력 문제를 경제 부문에 국한하고 있다는 인상을 초래했다. 더욱이 신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신설된 북방경제협력 위원회의 명칭도 동 정책의 정체성과 개념에 대한 혼란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9개 다리’ 전략을 비롯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을 상대로 추진한 초기 정책들은 상당 부분 경제·통상 부문에 집중된 것이었다. 이처럼 신북방정책의 어정쩡한 정책적 자리매김, 정체성과 개념 규정은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 극대화에 적지 않은 장애로 작용했다.

둘째, 신북방정책 등 대러 정책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제안·발표하면서 지정학적 변수로부터 독립적인 한러 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역대 정부의 대러 교류·협력이 이른바 ‘지정학적 변수’의 영향에 종속돼 지속성과 일

14) 장세호, “문재인 정부 5년 신북방정책 평가: 비판과 대안.” 『HEI REPORT』, 오산: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 2022, pp. 21~23.

15) Eom, Gu Ho, “The Evaluation of New Northern Policy: A Korean Perspective.” The 1st Korea-Russia Thinktank Networking Seminar(2021), p. 17.

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효과와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심각한 한계로 작용했다는 비판과 성찰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중 전략경쟁 심화, 미러 갈등 악화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계없이 한러 협력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일종의 정책 자율성 확보와 선순환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즉, 우선 한러 양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여기서 성취된 결과를 남북러 3각 협력 또는 역내 다자 협력의 확대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의 급진전과 교착 국면에서 또 다시 ‘북한 환원주의’에 빠져 대러 교류·협력 정책의 의지와 동력에서 많은 의문을 초래했다.¹⁶⁾ 2018년 ‘평창의 봄’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 예기치 못했던 훈풍이 불어오자 국내 정책 공동체 내에서는 이른바 비핵화 협상과 북미 관계 진전에 대한 우선주의와 만능주의가 또 다시 팽배했다. 더욱이 북핵 문제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지배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하노이 노딜’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처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당연히 러시아로부터 초기에 강조된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불만족과 의심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¹⁷⁾

〈표 1〉 2010년 이후 한러교류 현황

년도	교류 내용	촉진 요인	제약 요인
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방러(세계정책포럼)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G20) - 공동선언 발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량 회복 ◦수교 20주년 계기 활발한 교류 ◦1차 한러대화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교 20주년 ◦한러 정상외교차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한국의 5.24 조치 발표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대통령 방러(상트페테르부르크) ◦고위급 인사 방문 등 정부 간 교류 ◦2010년 공동선언 이행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러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일 위원장 사망

16) 신범식, “신(新)북방정책과 한러관계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6권 1호, 2018, pp. 129~130.

17) 장세호, “문재인 정부 5년 신북방정책 평가: 비판과 대안.” pp. 24~26.

년도	교류 내용	촉진 요인	제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 폭의 교역량 증가 ◦남북러 가스관 건설 논의 활성화 ◦6자 회담 재개 관련 협력 의지 확인 ◦2차 한러대화 개최 ◦한국 채방선 아라온호의 조난된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 구조 ◦푸틴 총리의 아무르산 호랑이 기증 		
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틴 대통령 방한(핵안보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 방러(APEC)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방한 등 고위급 인사 방문 등 정부 간 교류 ◦비자면제협정 협상 착수 ◦교역량 증가 추세 유지 ◦지방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남북러 3각 경협 논의 담보 ◦연례 한러대화 미개최 ◦어업쿼터 협상 결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틴 3기 정부의 출범과 신동방정책 가시화 - 극동개발부 신설 ◦한러 정상외교차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북한 붕괴론 부상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근혜 대통령 방러(G20) ◦푸틴 대통령의 방한(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러 공동선언 발표 - 비자면제협정 체결 - 문화원개설협정 체결 ◦고위급 방문 등 정부 간 교류 ◦나진-하산 복합 물류 사업 관련 남북한 3각 협력 협의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설립 합의 ◦교역량 증가 추세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한러 정상외교차 방문 ◦비자면제협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진핑 정권의 등장과 미러 간 긴장 조성
20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크림 병합 불인정/대러 제재 불참 ◦한러 무비자 시대의 개막과 상호 인적 교류의 급성장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착수와 1차 시범 사업 진행 ◦TSR-TKR 연결 사업 협의 ◦차세대 스텔스기 선정 과정에서 러시아 배제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표명 ◦중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북한의 대러 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대북 채무 탕감 - 러시아의 대서방 관계 악화속 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비자 시대의 개막 ◦양국 관계사의 연대기적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인 이주 150주년 - 조로우호통상조약 130주년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북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미·서방-러시아 간 대립 심화와 대러 제재 부과 ◦미중 간 긴장대립 강화

년도	교류 내용	촉진 요인	제약 요인
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러 정상회담(프랑스) ◦수교 25주년 축전 교환 ◦1차 동방경제포럼 개최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2~3차 시범 사업 진행 ◦나리시킨 하원의장과 나리시킨 안보 회의 서기 방한 ◦윤상현 의원 특사 파견 ◦정의화 국회의장 방러 ◦한러 해상 합동 훈련 ◦유라시아친선특급 ◦교역량 축소 ◦남북러 3각 경험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R-TKR 연결 사업 -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 남북러 송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교 25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러 제재의 영향 가시화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과 미리 갈등 심화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 70주년 행사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전승절 참가와 대비
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동방경제포럼 개최와 박근혜 대통령 방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대통령의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필 휘호 선물 - 푸틴 대통령의 사드 배치 문제 불언급 ◦한-EAEU FTA 체결 협의 ◦정의화 국회의장 방러 ◦러시아의 대북 제재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하산 사업 예외 ◦한국의 나진-하산 사업 중단 선언 ◦교역량과 투자 모두 침체·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러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국의 나진-하산 사업 중단 선언 ◦북러 관계 정체
2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 정부 출범 ◦3차 동방경제포럼 개최와 문재인 대통령 방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대러 협력의지 피력 - 신북방정책, 북방위, 9개 다리 ◦4건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송영길 특사, 박원순 서울시장, 추미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러 ◦한러 교역량 증가세로 전환 ◦한러 지방협력포럼 창설 합의 ◦한러 인적 교류 사상 최대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신정부 출범과 신북방정책 표방 ◦한러 정상회담 ◦대러 제재 여파 축소 ◦러시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신규 대북 제재 ◦악화된 북미, 북중 관계 ◦러중관계의 강화와 북핵 관련 중러의 공조

년도	교류 내용	촉진 요인	제약 요인
20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월드컵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하원 연설 ◦한러 정상회담(싱가포르 ASEAN)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 ◦러시아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상호 공감 ◦4차 동방경제포럼 개최와 이낙연 총리 참석 ◦한러 교역량 증가세 유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방한 ◦문희상 국회의장-블로딘 하원의장 회담(터키) ◦평창 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계기 체육·문화 교류 활성화 ◦1차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중 전략경쟁 본격화 ◦북미 비핵화 협상 급진전에 따른 '북한환원론' 대두 ◦러중 간 전략적 제휴에 따른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성 축소
20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러 정상회담(오사카 G20) ◦한러 교역량 증가세 지속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9개 다리' 행동 계획 성안 ◦파트루셰프 안보회의 서기 방한 ◦문희상 국회의장 방러 ◦문희상 국회의장-블로딘 하원의장 회담(카자흐스탄)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독도 영공 침범 ◦남북러 3각 협력 정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협상 난항으로 추동력 상실 ◦5차 동방경제포럼 개최와 홍남기 부총리 참석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구성 ◦2차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블라디보스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디 방문 한국인 5년 사이 10배 증가 - 인천-블라디 항공편 주당 70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 하노이 비핵화 협상 결렬 ◦미중 전략경쟁 지속 ◦북러 정상회담 개최 ◦한국 측의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관심 축소
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교 30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 간 축전 교환 - '상호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1년 연장' - 코로나19의 대확산에 따른 비대면 위주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교 30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중 전략경쟁 지속 ◦코로나19 대확산

년도	교류 내용	촉진 요인	제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신북방협력의 해' 진행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지속 ◦교역량의 큰 폭 감소 ◦외교부 내 러시아 전담 과 신설 ◦유윤근 전 주러 대사 특사 파견 ◦러시아의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반복 ◦한국의 동북아방역공동체 참여 제안과 러시아의 수락 ◦인적 교류 대폭 축소 		
20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폐막식과 양국 외교장관 상호 방문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과 러시아의 긍정 평가 ◦교역량 증가 추세 전환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지속 ◦3차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울산) ◦4차 한러지방협력포럼 개최지 부산 결정 	◦한러 상호교류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든 정부 출범과 미러 관계 악화 ◦코로나19 위기 지속

출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의 연례보고서 『Russia Report』 2010~2021년 한러관계 관련 내용을 필자 종합

〈표 2〉 한러 교류의 주요 촉진·제약 요인

촉진 요인	제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전략적 이해와 정책적 지향의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남북한 등거리 정책과 신동방정책 - 한국의 3대 신실크로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러, 미중 등 역내 주요국 간 대립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 미러 관계의 정체·악화 - 군비 경쟁 강화와 군사·안보 현안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간 교류·협력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 -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북미 관계의 경색 - 비핵화 협상의 난항과 갈등 고조 - 대북 제재의 부과와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 관계사의 연대기적 계기와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 20, 25, 30주년 - 고려인 이주 150주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문제 악화 시 러시아의 대북 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이견 - 대북 제재의 이행·준수와 확대·완화 이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민관, 민간 차원의 정례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1차관 전략대화, 국가안보실-안보회의 교류 등 - 한러지방협력포럼, 한러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발 안보 위기의 발생과 대러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러 제재에 따른 협력환경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면제협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상호 인적 교류의 증대와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의 대확산 등 비전통(신형) 안보 분야의 현안 대두

III. 러시아발(發) 리스크와 대응 전략

1. 러시아발 리스크의 유형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러시아로부터 초래되고 있는 리스크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정학적(정치·안보적) 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동 리스크는 여러 사안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탈냉전 시기 다소 약화됐던 진영구도가 재등장하고 구조화할 가능성이 조금씩 확대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 과정에서 미국은 대중국 역지를 위해 동맹국·우방국 네트워크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4자 안보대화(쿼드), 호주-영국-미국 간 3자 동맹(AUKUS)의 등장이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대서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인 나토의 활동 영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고자 하며, 이른바 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위시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간 밀착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양국은 2019년 양자관계를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한데 이어 2022년 2월 ‘제한 없는’ 협력을 선언한바 있다. 실제로 중러는 정치·안보적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군사적 협력의 폭과 심도를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일을 일축으로 중러를 다른 일축으로 하는 진영적 대결 구도가 형성·작동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역내 국가들은 소위 양자택일 딜레마에 처해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행보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평양은 최근 수년간의 강대국 경쟁 국면을 대미 공동전선의 구축과 국제적 고립의 탈피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

계를 강화하고 삼각공조를 복원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북중러 북방 트라이앵글이 재구축됨에 따라 한미일 남방 트라이앵글의 적극적 복원·작동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이 같은 냉전적 진영 구도의 형성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크게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그동안 종합 국력의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해 온 것은 분명하나 진영 내 위계를 고려할 때 상대적 국력 취약에 따른 운신의 폭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역내 군비경쟁의 강화 추세와 러시아의 단독·연합 군사훈련 등이 한국에 상당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의 지정학 경쟁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군비경쟁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1980년대 초부터 이른바 글로벌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성과를 축적해왔다. 이 같은 성과는 양국 간 상호 선제공격과 보복공격 능력의 보유에 따른 상호 확증파괴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¹⁸⁾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러 간 군비통제체제가 위기를 맞았고, 2002년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 2019년 중거리핵전략조약(INF), 2021년 항공자유화조약(OST)이 연쇄적으로 파기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은 당연히 러시아의 군비 강화의 흐름으로 이어졌고, 미중 전략 경쟁의 파고 속에서 중국의 ‘강군몽’에 기초한 군사력 강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기능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군관구 개편 등 무기체계 개선 등 군 현대화를 추진해왔고, 극초음속 기반의 신무기를 개발·배치하는 등 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또한 러시아는 대미 공동전선 구축의 차원에서 중국에 군수산업 기반을 지원함과 동시에 S-300 및 S-400 방공 시스템과 Su-35 등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등 군사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 같은 러시아의 군비 강화 흐름은 당연히 주변국의 위협 인식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역내 군비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8) 장세호, “중거리핵전략조약 파기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INSS 전략보고』 no. 45, 2019, p. 2.

특히 러시아는 ‘보스토크(Vostok)’로 명명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자국의 동부 영토와 그 인근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잦은 진입과 2019년 7월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도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태는 물론 한국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무력시위이자 한미 미일의 대응태세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에 적지 않은 군사-안보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한국군도 상응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국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함께, 최근의 국제적 지정학 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사드와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우려 사항이다.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팽창과 소위 A2AD(Anti-Access & Area Denial)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고,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 정치권 내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 문제가 논쟁 사안으로 부각된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 INF 폐지 이후 미국이 한국에 자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러시아는 중국만큼 강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가 미국의 사드 추가 배치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⁹⁾ 만약 동 사안이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한러 사이의 심각한 안보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군사 무기 지원 문제도 한러 관계에 심각한 갈등 사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19)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동주·장세호,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 pp. 60~61 참고.

른바 민주주의 세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에 공격 무기 지원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이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는 달리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공격 무기 기원으로 인식됨으로써 양자 간 안보 갈등으로 확대될 개연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리스크이다. 미국 대 중러 간의 대립 구도는 군사·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통상 영역에서도 침투해지고 있다. 미국의 자유자본주의와 중러의 국가자본주의, 그리고 미국의 금융자본주의와 중러의 산업자본주의 간 경쟁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약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신지역주의와 경쟁적 지역주의의 확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이 적극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한국이 참여를 결정하자 중국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²⁰⁾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한국의 대러 국제제재 동참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도 적지 않다. 구체적 사례로는 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정과 경제적 보복, 이에 따른 한러 교역과 투자 감소,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 피해, 전쟁과 제재의 장기화에 따른 전략물자(에너지, 식량, 자원 등)의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 등을 주요 리스크로 꼽을 수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양국의 교역 총액은 274억불이며, 이는 한국의 전체 교역액(1조 2천 596억불)에서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양국의 교역 구조를 고려해 볼 때 단기적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으로 대러 무역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반도체 수출에 대한 FDPR의 적용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 등과 관련한 개별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는 국제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금융 부문에서 맞제재를 시행하고

20) 성원용,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크라스키노 포럼 등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22년 4월 19일), pp. 60~65.

있다. 동 제재가 한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현지에 진출하거나 러시아와 연관된 개별 기업들이 자본 운영의 경직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동 부문에서의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환차손 등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약화도 우려 지점이다. 특히 공급망 경색으로 말미암은 국제 인플레이션이 수입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한국에 인플레이션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¹⁾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고강도 대러 제재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와 금융제재를 두 축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강도 대러 제재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러시아 실물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이 현격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 러시아 실물 경제가 위축될 경우 수익성 약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광범위한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양국 간 교역액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FDPR의 적용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대러 수출의 주력 부문인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에 실질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수입이 제한되면서 화석연료의 공급 감소 문제가 한국 기업의 생산성 약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²²⁾

셋째, 북한 리스크의 확대·심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문제된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은 미중 미래 간 긴장·대립 과정에서도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의제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미래 경쟁이 구조화·침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내 진영 구도의 복원은 동 사안의 해결을 요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

21) 정민현,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세미나 발표논문집(2022년 8월 4일), pp. 46~51.

22) 위의 글, pp. 52~53.

화시키고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작금의 국제·지역 차원의 지정학적 대결 구도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현격히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라크, 리비아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북한에 핵을 포기한 국가의 부정적 후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어찌면 북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대변되는 국제적 합의를 통한 안전보장 약속의 허망함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²³⁾ 따라서 북한은 핵과 그 운송수단에 대한 보유 욕망을 강화하게 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 사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의 심화 과정에서 북러 간 밀착이 강화되고 러시아의 대북 경사가 노골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규탄 및 제재 결의에 반대했으며, 동 사태에 대한 책임이 미국의 패권정책과 NATO의 지속적 동진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그동안 견지해온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에 기초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승인을 보류시켰으며,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이 1년 반 이상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모스크바는 북한의 ICBM, SL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에 반대하여 그 채택을 기어이 무산시켰다.

또한 북한은 2022년 7월 13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했다. 그동안 두 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국가는 러시아와 시리아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양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²⁴⁾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은 10월 4일 러시아의 4개

23) 성기영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가와 향후 국제질서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pp. 77~78.

24) “КНДР признала ДНР и ЛНР.” ТАСС, 13 июля 2022.

점령 지역 병합을 지지한 바 있다. 더욱이 DPR·LPR과 북한은 해당 지역의 전 후 재건 사업과 관련한 북한 노동자들의 파견 문제와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품과 설비의 제공, 광물자원과 식량 교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²⁵⁾ 그뿐만 아니라, Daily Mail 등 일부 서방 매체들은 평양과 모스크바가 10만 명의 북한군을 DPR과 LPR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그 진위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²⁶⁾

이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양국 모두 국제적 고립 상황을 타개·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미리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 내 완충지대 유지 측면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점, 북한이 대중 영향력 지렛대 확보와 열악한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대러 관계의 진전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까닭이다. 이처럼 러시아가 그동안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노골적인 대북 경사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다양한 안보적 리스크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또한 역내 대립적 진영구도의 약화를 위해 점진적 방식의 동북아다자안보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핵심적 동력 중 하나인 러시아의 이탈은 여러모로 피해야 할 리스크라 할 수 있다.

2. 한국 신정부의 대응 전략

(1)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지정학적 지렛대 확보

정치·안보적 관점에서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한국의 입지와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양자관계의 적절한 관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25) 알리나 샤라페티노바, “팬데믹 시기 러·북 관계: 러시아의 시각.” 『Russia-Eurasia FOCUS』 제698호, 2022, p. 3.

26) “Desperate Putin ‘is considering turning to Kim Jong Un for help in Ukraine and offering energy and grain in return for 100,000 soldiers’, Russian reports claim.” *Daily Mail*, 5 August 2022.

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중간국인 한국으로서는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이른바 ‘균형’의 관점에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지역 차원의 강대국인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묵인·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이른바 ‘북합 대전환’의 시기에 ‘글로벌 중추국가’의 지위를 획득·강화하기 위해 역내 지정학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소위 ‘선택 강제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탈냉전 초기 러시아의 현격한 국력·국위 저하로 인하여 여전히 러시아를 몰락한 제국 또는 경제적 후진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종합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신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의 외교전략에서 러시아의 가치가 부당하게 평가 절하된 측면을 부인키 어렵다. 여러 부정적 여건 하에서도 국제·지역적 강대국으로 복귀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재인식·재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양자관계의 관리와 진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²⁷⁾ 이런 점에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96번 과제에서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 모색이 제시된 것은 여러모로 시의적절하다.²⁸⁾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미국과 서구세계의 반러·반중연대의 ‘약한 고리’로 파악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접근 유용성과 필요성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는 한국을 명백한 적 또는 미국과 서구세계와 대등한 수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러시아의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인식의 단면들에 존재하는 중간지대(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와 유용성에 대한 기대)를 국익 제고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²⁹⁾

27) 신범식 외, 『유라시아를 향한 한국의 도전』, 서울: 도서출판 이조, 2022, pp. 52~54.

28)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p. 169.

또한 역내 주요국의 전환기적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대응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미중 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한일-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주축으로, 북러는 중국과의 준동맹관계를 주축으로 불가피하게 경쟁·대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 러시아, 일본 모두 ‘주축+ α ’에 대한 고민, 즉 전략적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 탐색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역내 환경과 국가 간 관계 구조는 냉전기의 그것처럼 획일적으로 구획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심지어 첨예한 경쟁의 와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조차도 다양한 연성 이슈와 관련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취약한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와 러시아가 추구하는 ‘+ α ’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 즉 공유 이익을 명확히 식별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러시아의 과도한 대북 경사 방지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한 북한의 행보가 재개되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억지·완화할 수 있는 외부 행위자인 러시아의 대북 경사 또는 묵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자관계의 적극적 진전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이 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으로 정체됐던 북러 양자관계는 동 전쟁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대러 규탄에 반대하면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이에 호응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철회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

29) 장세호, “문재인 정부 5년 신북방정책 평가: 비판과 대안.” pp. 40~41.

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현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상향 조정하고 그동안의 남북한 등거리 정책에서 북한에 대한 경사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2022년 8월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발생·확산의 경로가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주장에 동조한 바 있다.³⁰⁾

이 때문에 한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러 양자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한축으로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 지렛대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에 과도한 대북 경사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묵인과 지원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명확히 경고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재개를 묵인하거나,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무력화에 나설 경우 역내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가 핵비확산체제의 설계·운영 과정에서의 그들의 기여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표방해 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강대국’ 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는 일본과 한국에 핵공유 또는 핵무장 의지를 고조시킴으로써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고, 러시아의 동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원칙 수립과 일관된 대응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천명하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 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가치의 관점에서 국제규범의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이익의 관점에서 상황 개선에 따른 유연성 견지의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은 러시아가 제기한 다양한 안보 우

30) “주북 러대사, 대북전단·물품이 北 코로나 감염위험 높여.” 『연합뉴스』 2022년 8월 25일.

력을 이해하지만, 러시아의 유엔헌장 제2조 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호히 규탄한다. 둘째, 한국은 우방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물론, 러시아-나토 간 상호 안보 문제에 대한 갈등이 조속히 정치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그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후 복구,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다. 넷째, 한국은 러시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규탄의 의미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태의 전개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입장을 조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로서는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단면들을 때때로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독자적 운신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단면은 2019년 북러 정상회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소위 한국의 ‘제한된 주권(limited sovereignty)’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인식이 지극히 부당하고 못마땅한 것이지만,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태도에서 한미 양자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은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개별 사안의 대두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위에서 제기한 가치와 이익 간 균형의 관점에서 정립된 원칙에 입각하여 유연하면서도 상대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4) 경제·통상 영역에서 한러 간 협력 복원의 계기와 동력 마련

경제·통상 이익의 관점에서 러시아는 현재는 물론 미래 협력의 가치를 가진 국가로서 적절한 여건이 형성될 시 빠르게 협력적 상호작용의 복원을 모색해

야 한다. 러시아는 한국에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산업 분야의 수입국이자, 에너지 등 원자재 수출국으로서 10대 교역국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러 제재 참여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비우호국 지정으로 양자 경제 협력에 심각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제재의 여파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10대 대기업 중 6곳에서 경영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제 활동에서 실질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한러 경제 교역이 현격히 축소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러 간 경제적 밀착이 가속화하고, 우리가 러시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온 경쟁력 비교우위 부문이 중국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프로세스에 따른 대러 제재 완화·해제에 대한 의지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상대의 우려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즉 이번 전쟁은 승자독식의 제로섬게임보다는 특정 시점과 조건에서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상호 양보를 통해 갈등과 대립이 해소·봉합될 가능성이 크다.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시 조성된 전황이 양측의 양보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며, 이 때문에 양측은 전쟁 지속에 따른 부담보다 양보의 비용이 더 적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리한 국면 창출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다만, 2022년 3월 5차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서 나타났듯 특정 시점과 조건 하에서 양측의 대화에 대한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NSC 러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토마스 그래험 등이 언급하듯, 특정 시점과 조건 하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서구세계도 러시아에 제재 완화·해제에 대한 유인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현재 한국의 대러 제재를 러-우, 러-서방 간 평화협상에서 구체적 합의 도출, 러시아의 실질적인 군사행동 중단, 전후 복구의 본격화 등의 단계별로 완화·해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러시아 측에 제시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오해를 최소화하고 한국의 행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축이 요망된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그 범위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국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러 제재에 쿼드 회원국인 인도가 미국의 제재 참여 요구를 거절했으며, 나토 회원국 터키,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 전통적 우방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에 불참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설득 논리로는 러시아에 거주 중인 동포, 교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지 진출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재개 과정에서 러시아의 과도한 대북 경사와 지원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을 한러 양자관계의 관리를 통해 방지하고자 함을 핵심 명분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현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남북러 3각 협력 사업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단발성 양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우선하여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단기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구세계의 포괄적·전방위 대러 제재는 가격 변동,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 우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촘촘하고 선별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금융제재가 장기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석연료 수급, 국제·지역적 교역 구조 변화, 세계 경제·무역의 위축 등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응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 공식·비공식 소통 강화를 통한 상호 적대감을 완화

신뢰할만한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 발굴·운영함으로써 상호 적대감 완화하고 향후 관계 진전의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 적절한 여건이 형성될 경우 공식 소통 채널을 활용해 양자관계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 또

는 산업부 장관의 안드레이 콜릭 주한 러시아 대사 소환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신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행해진 관례를 명분으로 러시아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순서를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마지막 순서로 배치하고,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도 동시 파견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특사단 파견의 규모에 차별을 두어 정책적 우선 순위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사 파견 시에는 적절한 여건 형성을 조건으로 한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고 개최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피력해야 한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답방 약속이 코로나19 감염증의 대확산 등으로 미뤄져 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강조하고, 여건 형성 시 그 이행 필요성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고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주한 러시아 대사관 채널을 통해 개진·전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동맹국들과 국제여론을 고려해 현직 관료보다는 신뢰할만한 전직 공직자 또는 민간 인사의 방류를 통한 소통이 유용해 보인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내 상호인식 개선을 위한 한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돼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한국은 물론 러시아 내에서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양자관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현실적 상호이익과 함께 상대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태도가 핵심 토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거치며 양국 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돼온 상대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크게 손상된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적절한 여건이 형성될 시 한국이 2020~2021년의 ‘한러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여 다채로운 교류·협력을 재개·확대할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는 가운데 확고하고 독심 있게 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교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쳐 오면서 불가피하게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치우쳐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 시기 두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소모와 희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한국으로서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연대(solidarity)’를 모색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는 한국 외교의 총체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유연한 운신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역내 진영구도의 완화 또는 종식,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유리한 구조적 환경의 조성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외교의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며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한국 외교의 협력과 연대의 대상으로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2010년대 이후 한러관계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러시아로부터 비롯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진전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전략적 이해와 지향의 수렴을 추구하면서 관계 발전의 동력을 마련했다.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각각 3대 신실크로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정책을 추진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푸틴 정부도 유럽·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국제질서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에 대응해 신동방정책을 표방하며 한국 등 역내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모색했다. 이 같은 양국의 국가전략의 수렴은 한러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촉진요인으로 기능했다. 또한, 전략적 협력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한러 간 정상회담과 그 후속작업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사의 연대기적 계기들을 활용한 기념행사와 정부, 민간, 민간 차원의 정례·수시 교류는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물리적·비물리적 토대를 형성케 했다. 무엇보다 비자면제협정의 체결 등은 상호 인적 교류의 증대와 상호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 한러관계는 여러 장애와 정체·퇴행의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어려움이 양국 자체의 문제에서 발생했다기보다 오히려 국제·지역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외부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러관계의 지난 과정에서 표출된 크고 작은 위기는 대부분 미중 전략 경쟁과 미리 대립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좌초, 2014년과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와 대러 제재, 코로나19의 대확산에 따른 교류·소통의 중단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리스크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지역 차원에서 발생하는 강대국 간 경쟁과 대립으로 말미암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러 양자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지정학적 중간국으로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은 물론, ‘북합 대전환’ 시기에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의 관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강대국 경쟁의 심화와 국제·역내 진영화 경향 강화를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군사·대외 행보를 적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역내 행위자인 러시아의 대북 경사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입장을 가치와 이익의 균형의 관점에서 촘촘하게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경제·통상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적절한 조건이 형성될 때 양국 간 경제적 상호작용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상호 적대감을 완화하고 향후 관계 진전을 위한 비물리적 토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 공식·비공식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재남, “역대 정부의 대러 정책 성과 및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대러 정책 과제.” 『주요국제문
재분석』 2013 봄, 2013.
- 라승도 외, 『극동의 부상과 러시아의 미래』,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2019.
- 서동주, “한-러 관계 분야.” 『2010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용인: 한국외대 러시
아연구소, 2011.
- _____, “한러관계 결산: 전략적 협력의 초석 다지기.” 『2011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용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2.
- _____,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놓기 - 2012년 한-러관계 결산.” 『2012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용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3.
- _____, “미래 한-러관계 내실화를 위한 여정.” 『2013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용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4.
- 서동주·장세호,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 성기영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가와 향후 국제질서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 성원용,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크라스키노 포럼 등 주
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22년 4월 19일).
- 신범식,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1
호, 2010.
- _____, “신(新)북방정책과 한러관계 전망.” 『성균치이나브리프』 제6권 1호, 2018.
- 신범식 외, 『유라시아를 향한 한국의 도전』, 서울: 도서출판 이조, 2022.
- 알리나 샤라페트디노바, “팬데믹 시기 러-북 관계: 러시아의 시각.” 『Russia-Eurasia FOCUS』
제698호, 2022.
- 장세호,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INSS 전략보고』 no. 45, 2019.
- _____, “문재인 정부 5년 신북방정책 평가: 비판과 대안.” 『HEI REPORT』, 오산: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2022.
- 정민현,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세미나 발표논문집(2022년 8월 4일).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
- 현승수, “2014 한-러 관계 회고와 전망: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 속 지속가능한 협력 모색.”
『2014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용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5.
- 홍완석,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의미, 평가, 과제.” 『슬라브연구』 25권 1호, 2009.

Eom, Gu Ho, “The Evaluation of New Northern Policy: A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1st Korea–Russia Thinktank Networking Seminar(2021)

홍완석, “[시론] 한-러 관계, 과연 전략적인가?.” 『중앙일보』 2013년 11월 15일.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성명 전문”, 2013년 11월 13일.

“주북 리대사, 대북전단-물품이 北 코로나 감염위험 높여.” 『연합뉴스』 2022년 8월 25일.

“[한러 정상회담] 남북러 경제협력 통해 북핵도 해결.” 『한국일보』 2013년 11월 14일.

“Desperate Putin 'is considering turning to Kim Jong Un for help in Ukraine and offering energy and grain in return for 100,000 soldiers', Russian reports claim.” *Daily Mail*, 5 August 2022.

“КНДР признала ДНР и ЛНР.” ТАСС, 13 июля 2022.

Abstract

Evaluation of Korea–Russia Relations since the 2010s
and the New Korean Government's Strategy to Risks from Russia

Se Ho Jang(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main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Russia relationship since the 2010s. It also derives various risks posed by Russia at this time and presents countermeasures. Since the 2010s, Korea and Russia have been seeking the convergence of mutual strategic interests and orientations, providing a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In the process, the summit between the two countries, regular and occasional exchanges at the government, public–private and private levels, and the conclusion of visa waiver agreements served as major factors that promoted the progress of bilateral relations. However, Korea–Russia relations had to face a moment of stagnation and regression due to external factors relate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der. Above all, international and regional issues, such as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pose a number of risks to bilateral relations. To respond to this, Korea needs to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First, Korea–Russia relations must be managed stably in order to realize the vision of a Korea's “global pivotal state.” Second, Russia's excessive inclination toward North Korea must be prevented. Third, a balanced policy should be prepared on the Russia–Ukraine war.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the recovery and restoration of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fth,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continued.

Keywords: Korea–Russia Relations, New Northern Policy, New Eastern Policy, Russia–Ukraine War, Risks

투고일: 2022년 11월 4일, 심사일: 2023년 2월 7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11일